

# 광주·전남 외국인 5만명 시대

### 고용허가제 시행 7년... 이주노동자들의 실태

## 불법 체류 줄었지만 잦은 이직 문제로

### 광주·전남 2892곳 1만1151명 근무 외국인 쿼터 축소에 중소기업 호소

오는 17일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7년이 된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는 물론 불법체류율을 크게 낮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잦은 이직과 고용비용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광주·전남 2892곳서 1만1151명 근무 =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인 139만2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온 외국인 인 71만6000여명이며, 이 중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비전문인력이 49만1000여명이다. 이들은 베트남·싱가포르 등 15개국에서 왔다.

광주·전남에는 7월 말 현재 1만1151명이 일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권에 6034명, 목포권 3769명, 순천권 910명, 여수권 438명 등이다. 이들은 제조업과 농·축·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2892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올 업종별 취업자수를 2004년(327명)과 비교하면 무려 34배가량 급증했다.

◇불법 체류·체불 임금 급감 = 고용허가제 도입 후 불법 체류와 임금 체불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최근 '고용허가제 7주년 평가 토론회'에서 "6월 말 현재 불법체류자는 16만8450명으로 지난 2002년 산업연수생 제도때의 28만명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체류기간 만료(4년10개월)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외국인 근로자가 올해 3만3944명,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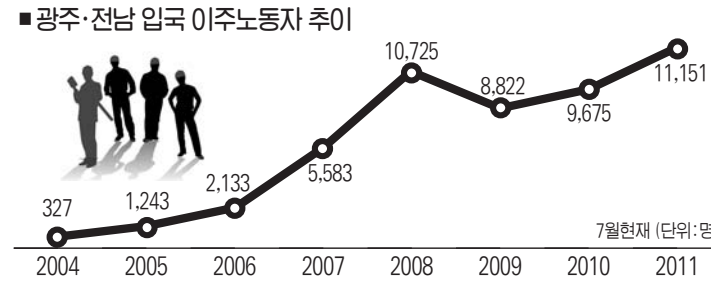
년 6만7118명으로, 이들의 귀국 여부가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정착에 최대 복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전국 최초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유관기관 5곳, 사업장 54곳과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임금 체불도 크게 줄었다. 2001년 산업연수생제 시행 당시 임금체불 경험 비율은 36.8%였으나 고용허가제 시행 후인 2007년 9.0%에서 올해 5월말에는 1.6%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몸값 올라 고용비용 급증' 중소기업 불만 =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역 중소기업에 18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실태 조사'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73.6%)이 고용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을 경험했다. 특히 10명 중 4명(35.9%)가 많은 고용 계약이후 불과 3개월 이내에 이직했다.

현재 고용허가제는 약덕업체의 부당한 대우를 막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세차레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중소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업체는



아예 없애거나 1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들며 외국인 근로자의 임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것에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

외국인 쿼터에 대해서도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쿼터를 줄이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계는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난달 24일 광주시 북구 전남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11 전국 외국인근로자 배구대회'에 참가한 경남 창원지역인 도네시아 근로자들이 전통악기를 두드리며 열띤 응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국내 이주노동자 78% "욕 들으며 일한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중 상당수가 작업장에서 욕설을 들으며 일하고, 일부는 폭행, 성희롱 피해까지 호소해 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는 전국의 이주노동자 931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는 작업장에서 욕설을 들었고,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 26.8%에 이르렀다고 15일 밝혔다. 성희롱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도 13.5%나 됐다. 또 43.9%는 식사법이나 예절의 차이로 '문화적 차별'을 당했고 21.6%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았다고 답했다.

이주노동자 중 40.4%는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1년 이상 기다렸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에 오기 위해 한국어 시험비용과 소개비용 등으로 46.8%가 500달러 미만, 21.1%는 500~1000달러, 12.1%는 1000~1500달러를 썼다고 답했다. 한국에서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39.5%가 8~10시간, 34.9%는 10~12시간이라고 답했으며 야근은 약 20%가 격주로 1주일 내내 한다고 대답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다문화 학생수 3년만에 2배

전국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3년만에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08~2011 시도별·각급학교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전국의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3만8890명으로, 2008년 2만174명보다 92.7% 늘어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외국인 문화센터 소장이 본 외국인 근로자



이천영 소장

## “단순노동하지만 우리경제의 큰 축 돈만 벌고 떠날 이방인 시각 경계를”



김수일 센터장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경제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되고,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에서 외국인 근로자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천영(53) 소장과 영암에(재외국민) 근로자 문화센터를 조성, 3년째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김수일(56) 목사는 “광주 하남산단과 영암 대불산단 등 중국의 산업단지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중심이 돼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더 이상 이들을 낯선 이방인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비록 상당수 외국인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서 단순노동을 맡고 있지만, 이들은 국내 산업체계의 가장 밑바탕이 되고 있다”며 “만약 이들이 한순간에 모두 빠져나간다면 우리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다문화가정에 비해 열악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역할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소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예산은 다문화가정에 투입되는 예산의 10% 가량이 불과하다”며 “전국 곳곳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있지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없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돈만 벌고 떠날 외국인”으로 깎아내리는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도 경계했다. 그는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고국에서 고급 교육을 받거나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며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아직까지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수일 목사는 지역 거주 외국인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목사는 “한국어 교육 외에 주

류 사회와 융합할 수 있도록 다문화 시대에 걸맞게 외국인 전용 센터를 조성하고 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와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의료보험 및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 차량등록시스템도 서둘러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아시아계 외국인들이 대부분인데도, 일부 국가 언어만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치를 수 있는가 하면,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몰고 다니는데 따른 문제점 등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확대 해석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시민 수가 늘면 자연스레 범죄도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닌 한국인의 그것과 동등한 잣대를 들이대자는 얘기다.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 교육·문화적 인프라 턱없이 부족

### 합리적 정책 마련 절실

광주·전남 거주 외국인이 5만명을 넘어섰지만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 다문화 경쟁력을 확보할만한 여건은 열악하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외국인 현황'(2009년)에 따르면 외국인 지원기관과 단체는 광주와 전남에 각각 35개, 모두 70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남지역의 경우 20개 시·군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주로 결혼 이주 여성과 자녀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탓에 외국인 노동자 등을 위한 문화적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외국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공간도, 지역 내 외국인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줄이고 가까운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프로그램도 빈약한 편이다. 지역 내 정착한 외국인 통

계조차 행정기관마다 혼선을 빚고 있는가 하면, 외국인들이 도움이 될만한 정보에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역에서는 (재외국민) 근로자 문화센터 목포·영암지부, 목포이주외국인 상담센터, 전남·목포·영암 외국인 근로자문화지원센터 등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손발'을 자처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전문 통역은커녕 다국어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상담·문화·인권보호 프로그램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어 교육조차도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게 고작이어서 지역 내 외국인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영암군이 올해 말까지 영암군 삼호읍 영암리 일대 외국인 집중 주거지에 대한 대대적 환경

개선 작업에 나서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영암군은 전국 최고 수준(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8.3%)의 외국인 밀집 지역인 점을 고려해 국·도비 등 71억 원을 투입, 외국인 주민 센터 및 만남의 장소를 조성하고 체육시설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시설도 비슷하다. 전남도의회 임흥빈(신안 1·민주) 의원이 전남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2011년 시·군별 다문화 가정 학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3774명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학생들을 위한 별도 교육 시설은 없다.

전문가들은 지역민들과 거주 외국인들간 막연한 거리감을 없애고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외국인들이 지역 주류 사회와 융합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과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희기자 dok2000@kwangju.co.kr

**경매투자**

- 공동투자 및 자본주 모심
-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
- 지상권 등 특수물건만 투자
- 50%미만 물건만 투자

주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1 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50년 전통 · 대를 잇는 한의원

**잇몸병 한약 2첩**

붓고 시리고 애리고 피날때

**북경당 한의원**  
대인시장 한미소풍 맞은편

한의학 박사 **박상준**

전화 **227-7575**  
이이齋 ~ 치료 치료

## (호남) 4·19혁명자료를 찾습니다

「호남 4.19」는

- 광주군남로 3.15부정선거 첫 규탄 시위에 이어 그 동선(同線)에 촉발된 4.19혁명의 '시원(始原)' 이었고,
- 4.19혁명의 전국 불길들 당기게 했던 3대 첫 진원지로서 선봉적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 광주학생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5.18광주민주화 운동을 낳게 했던 한국 민주지형의 '토대' 였고 '허리' 다

그래서 「호남의 4.19」는 아직 못다 이룬 미완의 4.19를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의 '호남정신' 으로 완성도를 높여가는데 마지막 사명을 다해 갈 것이다

위 「호남 4·19 정의문(定義文)」에 따라 호남 4·19자료사 편찬을 위한 관련자료를 찾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기간	자료 내용	비고
2011. 8. 1~10. 31 (3개월)	1960년 4월 당시의 광주/전남·북 (호남) 4·19혁명관련 모든 자료 - 관련기록·격문·발표문·일기·숨은이야기·기타 문헌적 자료 - 관련사진·혁명참가·각급학교·단체·시민 등 모습 - 데모 참가자 녹취	- 미 공개된 자료는 소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일기 등 숨은 이야기는 내용에 따라 원고료 차등 지급

연락처 :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328(광주 4·19혁명기념관)  
전화. 062-224-0419 팩스. 062-222-0419  
kyy7514@hanmail.net

**호남 4·19혁명단체 총연합회**

##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건 기약서비스 · 개인 신용평가권리 철저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회)
- ◆대출금리 | 1년 6% 정도 (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대출기간 | 1년~10년 (본인 선택 연장 가능)
- ◆과대출 | 연체 (등금미달) 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원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액 중 선순위 대출시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역 선순위 - 연 5%~7.5% (연평균유동)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 공무원 대출

무담보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 기록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시금용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대출 포함)

APT 한도 : KBSI세 -80%+α (60%)  
전세권 담보대출 금리 : 연 5.9%~

★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담당 010-7112-3135